



서울역 여수·상하이 엑스포 마스코트 나란히 여수엑스포 조직위와 상하이엑스포 조직위는 11일 서울역에서 마스코트 제막식을 했다. 여수엑스포 여니와 수니, 상하이엑스포 하이바오 앞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현섭 여수시장,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홍하오 상하이엑스포 사무협조국장. <여수시 제공>

■광주시·전남도 '지역사회 건강통계' 살펴보니...

10명중 1.5명 고혈압 질환자

100명중 1명 암·뇌졸중 등 치명적 질환 경험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1천 명 중 100명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천 명 중 10명 이상은 뇌졸중, 암 등 치명적인 질환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처럼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상세하게 조사·분석한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지역민의 건강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건강지도'가 처음 나온 셈이다.

◇전남, 고혈압 질환자 가장 많아=2008 전남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주요 질환별 평생 의사진단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고혈압으로 1천 명 당 1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관절염 89.9명 ▲당뇨병 64.6명 ▲백내장 60.3명 ▲골다공증 55.9명 순이었다.

의사진단 유병률이란 인구 1천 명 당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한다. 또 치명적 질환인 암은 15.4명, 뇌졸중은 16.4명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심근경색증 10.5명, 협심증 12.7명으로 조사됐다.

주요 질환별 유병률 특성은 고혈압의 경우 남자(137.1명)보다 여자(192명)가 많았고, 고혈압 환자 94.6%가 정기적으로 혈압조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도 남자(63.3명)보다 여자(65.9명)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환자 10명 중 9명 가까

이는 인슐린 주사 등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뇌졸중은 여자(15.9명)보다 남자(16.8명)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질환별 지역간 큰 편차=고혈압의 경우 장성군이 14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포 137.8명 ▲진도 137.8명 ▲완도 136.2명 ▲담양 133.1명으로, 대부분 전남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곡성(92.7명), 무안(97.4명), 구례(104.3명) 등은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

당뇨병은 목포(64.5명)와 나주(56.9명), 함평(55.2명)군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고, 광양(34.9명)과 곡성(35.2명), 무안(37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뇌졸중의 경우는 장성이 19.1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도(16.3명), 순천(15.1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곡성은 3.7명으로 가장 낮았고, 여수와 영암도 각각 6.4명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곡성군은 고혈압과 당뇨병, 뇌졸중 등 성인병 유병률이 가장 낮아 건강 수준이 전남지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민 절반이 건강검진 받아=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55.3% 였었다. 광양시가 56.7%로 가장 높았고, 완도군이 37.9%로 가장 낮았다.

또 암 검진율은 43.3%로 집계된 가운데 목

포가 45.1%로 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근 신안이 31.1%로 가장 낮았다. 조사 대상자 절반 가까이는 46.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100명 중 10명은 최근 1년 사이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외래이용률은 24.3%였으며, 약국 이용률은 27.3%였다.

◇광주 15% 의료 사각=광주도 고혈압 환자가 1천 명당 139.6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골관절염 75.6명 ▲고지혈증 50.2명 ▲당뇨병 48.4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치명적인 질병인 뇌졸중은 13.7명, 암은 12.8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고혈압 유병률은 50세 이상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진단자 10명 중 8명이 혈압조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거주 성인 1천 명 가운데 12.8명이 의사로부터 암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진단을 받은 나이는 평균 51세였다. 남자들은 평균 53.2세에서 암진단을 받았고, 여자는 평균 50.2세였다. 광주에서 지난 1년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는 14.8%였고, 이중 경제적인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는 36%로 가장 높았다.

연간 입원율은 10.5%, 지난 2주간 외래 이용률은 23.2%, 약국 이용률은 33.6%였다.

지난 1년간 사고중독 발생률은 4.4%, 발생 건수는 인구 1천 명 당 47.6건이었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광복절 '생계형 특사' 범위와 기준

152만명중 150만명이 면허 제재 운전자 음주운전 제외...농어민·자영업자도 구제

11일 발표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공언한 대로 시민의 생활고를 덜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총 사면대상 152만여명 가운데 대부분인 150만명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이고 어업면허·허가와 관련해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받는 시민층도 포함됐다.

◇사면 대상=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이 쌓였거나 운전면허에 제재를 받은 운전자다. 사면대상 152만7천770명 중에서 '은전'을 받게 된 운전자가 150만5천 37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 방침을 처음 밝힌 6월29일을 기준으로 운전자 123만8천157명의 벌점이 삭제됐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19만7천614명의 결격기간이 해제돼 특별교통 안전교육(6시간)을 받으면 곧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정지기간인 운전자 6만9천605명은 나머지 처분 기간이 면제돼 운전대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특별사면

으로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면허시험장은 토요일까지 근무한다.

일반 형사법도 교도소에 수용 중인 2천314명중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자가 아닌 초범 또는 과실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집행이 면제돼 석방되고 절반 이상 복역한 수형자는 남은 형의 2분의 1이 줄어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15 민생사면의 일환으로 생계형 벌령 위반 어업인 1만 1천294명에 대해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해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업면허·허가 등이 취소돼 어로 활동에 나설 수 없었던 어업인들에게 면허·허가 재취득을 앞당겨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업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주시는 처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생계형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8천764명과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행정제재를 받은 해기사(선박을 운항하는 사람) 2천530명이다. 그러나 면허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 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감면 내용을 보면 어업면허·허가 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완료된 경우 기록을 삭제해준다.

8월 15일 기준 어업면허·허가가 정지 처분 중인 사람은 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거나 면제되고, 취소 처분을 받아 어업허가나 해기사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있는 사람은 제한 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정부가 지원하는 영여자금을 회수당한 어업인(약 200명)도 영여자금 재대출 제한 기간을 면제해주시기로 했다.

이런 특별감면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특사 제외 기준=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로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뇌물수수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물론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 공직자, 기업비리도 형이 확정된 경제인도 전면 배제됐다.

연환뉴스

역류자 석방·금강산 관광 재개 입장 전달

■현정은 회장 北 수뇌부에 전한 '정부 메시지' 물까

평양을 방문 중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 수뇌부에 건넨 정부 메시지를 어떤 것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10일 현 회장의 평양행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방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특사 자격이 아님을 분명히 했지만 나름 정부의 메시지도 전달됐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교류협력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현대그룹의 수장이 당국과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평양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준 특사'로 봐야 한다는 평가에 근거한 분석이 쏠린다.

그런 차원에 현 회장이 방북 이틀째인 1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또는 대남

라인의 다른 고위급 인사를 만났을 경우 정부가 현재 국면에서 전하고자 하는 대북 메시지에 대신 보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현 회장이 남북경협에 깊이 몸담은 민간인 신분인 만큼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현안보다는 인도주의 현안과 남북경협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는 공산이 커 보인다.

우선 현 회장은 역류 135일째를 맞은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의 석방과 지난달 30일 기관고장으로 월선했다가 북에 나뒀던 '800 연안호' 선원들의 조기 송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선결 과제는 역류된 납한 사람들의 귀환이라는 점

을 강조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 작년 7월11일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재개 방안을 모색하자는 정부의 기존 입장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작년 북한이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취한 '12·1 조치'에 따른 육로 통행시간대 및 통행인원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제한, 남북 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등을 원상복구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제안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현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이뤄지지 못한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해결 의지를 대신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연환뉴스>

특히 프리미엄 품질 아이벨리시아

고품질 재료, 건강민맛, 풍력있는 서비스

아이벨리시아

11월 11일 개업 기념 행사에 50% 할인

문의: 02-671-1199